

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12.(목) 한겨레, “임금체불 ‘혈세 땀빵’이 노동부 역할인가?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‘임금구분지급제’ 도입을 추진 중
 -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안이 2.6.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
 - 이와 함께,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좌정보와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임금 중간 착취를 근절하겠음
- 한편,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부담금(노동자 보수총액의 0.09%를 산재보험료와 통합 징수)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해 대지급금 지급 및 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특히 '19년 간이대지급금(舊 소액채당금) 상한액을 높이고(4→10백만원), '20년에는 생계비 융자 제도, '21년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제도를 다각화해 왔음
 - '26년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*하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('26.1.29.)됨에 따라,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

* (현행)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

(개선)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

□ 이와 함께, 15년 만에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
(보수총액의 0.06%→ 0.09%)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확보되도록 한 동시에,

○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,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
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*도 시행 중

* ①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처분 절차 준용, ②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
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지급 책임이 부여되도록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('26.5.12. 시행 예정)

○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가 생계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하는
한편,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진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	이찬웅 (044-202-7529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준호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최다솜 (044-202-7072)

